

# 사회적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

조동준(서천군일자리종합센터 사무국장)



##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문]

### 사회적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

2011. 10. 28

조동준(서천군일자리종합센터 사무국장)

#### - 들어가며 -

총론에서 우리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더욱이 현재의 자본주의는 단순히 시장경제의 주체(기업, 개인)를 넘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그 속에 속한 주민의 삶에까지 피해가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구축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성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는 무너지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할 중요한 기제이고, 외부의 거대 자본시장에 대응해 지역내에서 순환되는 경제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총론에도 불구하고, 시장자본주의 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과연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블록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토론자의 입장에서 이 자리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도달하기 위해 넘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 ‘사회적경제는 배고프다’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원류는 주로 서구유럽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송두범 박사의 발표자료에서 언급됐듯이 유럽의 경우 복지국가 퇴조기에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우리는 이제야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시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표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자본을 점유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본의 점유에 의한 개인과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 한다는 것은 ‘부의 편중’이고, 이것은 사람의 보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수록 시장경제의 폐해는 크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시작한 것이 IMF 이후 경제위기에 몰려서 진행됐던 정부의 사회정책 또는 복지정책(자활사업, 공공근로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물론 시민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생활협동조합이나 지역화폐, 개별적인 생산공동체 활동 등이 있겠으나 큰 줄기를 보면 복지정책으로 추진됐던 자활지원사업과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기폭제가 되어 확대되었다.

보편적 복지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는 우리에게서 여전히 시장경제의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자본과 시장경제에 대응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의 영역의 활동이 여전히 ‘생산’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국가 복지수준이 대폭 향상되지 않거나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따지는 사회적기업 정책 아래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착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거나, 시장에서의 상거래가 필요치 않은 소비, 교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활동해도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경제의 실현은 요원할 것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나 몇몇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희생을 전제로 해결되거나 개선될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

## 시장과 국가는 협조할 것인가?

일반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생산적 복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개혁적 복지학자와 실천가들은 ‘생산적 복지’가 담고 있는 대립적 개념에 대한 ‘몰이해성’을 비판했다.

다시말해 ‘생산’은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 혹은 ‘경제’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보편성, 분배, 균등이 작용하는 ‘복지’와 결합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면 이해하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과 예산의 투입은

어떠한 형태로든 ‘생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복지 또한 ‘투입=결과물’로 받아들였고, 특히 IMF 경제위기를 돌파하던 김대중 정부의 입장에서 더더욱 필요했던 논리였을 것으로 받아들인다.

진보개혁적 정부에서도 이런데 과연 시혜적 복지를 주장하고 시장친화적인 보수정부는 어떨 것인가? 우리가 주지하는 것처럼 시장경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혹여 수용하더라도 일자리의 ‘숫자’와 ‘매출’,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치열한 생존경쟁이 판치는 시장으로 사회적기업을 몰아넣는 지금의 사회적기업 정책, 그 이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시장은 어떨까?

자본으로 무장한 시장과 경쟁할 것인가?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 말하는 ‘틈새’만을 잘 노려 볼 것인가?

이미 초기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이 끝나면서 소위 ‘문을 닫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다.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사회적기업을 탓할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가뭄에 콩 나듯 근근히 살아남거나 대단히 크게 성장한 사회적기업도 존재한다. 이를 본보기로 나서는 수많은 사회적기업가, 혹은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시장의 영역과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생존할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비극적인 현실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간에 또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이 벌어지기 일수다.

## 그래도 사회적경제로 가자! 연대하자!

사회적경제란, 개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국한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 혹은 국가차원의 커다란 ‘블록’을 형성하는 문제이다. 그래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으로서 그 본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구축해 나가는데는 넘어야 할 숙제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의 속성이 갖고 있는 블록, 즉 ‘연대’의 가치가 사회적경제의 골간이 된다는 점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활동의 형태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연대성에 바탕한 경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관점이다. 이것은 재분배와 호혜성의 원칙이 통용되는 부문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고, 따라서 시장 판매를 통한 상업활동,

공공자금의 조달, 기부 및 후원금의 모집, 비화폐적 자원봉사활동 등을 모두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경제를 정의할 때, 시장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응으로서 호혜와 연대의 원리 속에서 발생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여기에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의 연대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작은 지역단위에서 연대하여 블록을 형성하고, 또 다른 블록과 블록이 결합하여 더 큰 블록을 형성할 때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연대의 경제, 사회적경제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런 토론의 자리는 물론이고, 서천사회적기업협의회나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또한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협소한 의미로 축소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의 틀을 벗고, 나아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하고 활동의 확대도 요구된다 하겠다.

## 서천군귀농인협의회와 사회적경제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군분투라는 표현처럼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제도하에서 지정요건에 맞추어 적절한 일자리 창출과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서귀협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수익사업, 즉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경제의 ‘생산’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쇼핑몰 운영, 생태건축 및 조경 등이다. 이 것으로 6~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고,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과 약속한 일정 금액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이 모두 기존 자본시장의 영역이고, 기존 시장의 상품과 경쟁해야 할 것들이다. 심지어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쇼핑몰, 생태건축 조차도 작게는 지역내 다른 사회적기업, 혹은 마을기업, 체험마을 등과 경쟁해야 할 것들이다.

치열할 경쟁이 판을 치는 시장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그속의 사회적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이라 생각한다. 과연 이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연대가 이루어질까?

따라서 생산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은 서귀협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귀협은 예시당초 ‘귀농지원’이 가장 큰 목적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고, 여타의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우수사례’인 것이다. 이런 서귀협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본 업무보다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생산활동에 치중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예를 들어 서귀협은 최근까지 63가구에 150여명의 귀농을 도운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점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대단히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50여명의 귀농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이런저런 생산활동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가치’를 환산한다면 그 규모는 웬만큼 잘나가는 사회적기업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슷한 예로, 저소득층의 무료간병으로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듯, 언뜻 비경제활동이나 생산과 직접 연관이 없다하겠지만 사회적가치를 경제적가치로 계상할 수 있는 장치가 연구된다면 이로서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경제의 일환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이를 통해 비생산 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